

#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 안돼”

### 특검, “기각 사유 검토 후 결정… 재소환 여부 향후 필요에 따라” · “대통령 대면조사, 2월초 반드시 해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재소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기각 사유 중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 부회장의 재소환 여부는 향후 필요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 등 기업에 대해 뇌물죄 적용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다

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서 “수사 일정상 2월초에는 반드시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일축했다. 현재로서는 수사 기한 연장 논의도 없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사실상 뇌물수수자로 보이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한 것이 무리였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박 대통령에 대면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장청구가 성립했다는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는 별개로 삼성그룹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중희(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 실장의 경우 뇌물공여 혐의의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특검팀은 지속해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특검팀이 향후 뇌물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특검보는 “최씨에 대해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최씨의 경우 이번 주까지 재판이 계속 있어서 재판이 종료되면 주말이든 다음 주 중이든 소환할 계획이다. 응하지 않으면 후속 절차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 지원을 했다는 게 혐의의 골자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돼, 4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후 법원은 19일 오전 4시53분께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후 오전 10시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법원의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지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

## “녹색 태풍으로 반드시 정권교체”

### 안철수 전 대표 군산방문 지지 호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군산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안 전 대표는 19일 신흥동 소재 구세군 후생원을 방문하고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대표는 “군산은 두 번째 방문으로 근대화후생원을 보유한 아름다운 도시다”라며, “제가 평소 아동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아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가 아동을 어떤 눈으로 대하는지가 그 나라의 수준을 나타내 준다”며, “아동이 건강할 수 있는 권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확대받지 않는 권리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아동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갈길이 멀다”라며, “오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지난 18일 한국지역신문협회 전북협의회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을 비롯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 김제시의회, 도시군 의장단협 개최

김제시의회회는 19일 전북도 각 시군의회의장, 부의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24차 전북 시군의회의 의장단협의회를 김제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전북 시군의의장단 협의회는 심의 안건으로 김제시의회에서 제안한 새만금 내부개발 국가주도 시행 건의안 및 조류 인플루엔자(AI) 사전 방역대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 송부하기로 하였다.

먼저 새만금 내부개발 국가주도 시행 건의안은 새만금 용지조성이 미미한 수준인데다가 국가예산과 공기업의 투자 없이 민간 투자에 의해 매립과 조성을 책임지게 한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주도의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새만금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AI 사전 방역대책 촉구 건의안은 사상 최악의 AI 발생으로 인해 농가피해가 심각해지고 해마다 발생하는 AI로 인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정부의 뒷북 대응과 실효성 없는 방역대책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점 방역관리지역의 가금류 겨울철 휴지기 제 도입 근거마련과 해당 농가 보상제 도입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김명지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김제시가 이루어갈 글로벌 첨단 도시와 새만금 미래도시로서의 앞날을 전북 시군의회의장단이 응원하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내병문 김제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AI문제와 경기침체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새해를 맞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며 14개 시군이 소통과 협력으로 똘똘 뭉쳐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특검, '정유라 특혜' 류철균 구속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이화여자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장 류철균(51) 교수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류 교수를 업무방해, 증거위조조사, 사문서위조조사,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소설가로서 필명 '이인화(仁化)'로 알려진 류 교수는 정씨가 대리수강과 대리 시험으로 특혜를 얻은 수업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의 담당 교수였다.

류씨는 정씨가 지난해 6월 1학기 과목인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S(합격) 성적을 주는 등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와 자체 감사, 교육부 특별 감사가 시작되자 조교들을 시켜 정씨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를 작성하게 하고 기말고사 출석부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류 교수는 위조한 정씨 명의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 등을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담당자에게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교들에게 교육부 감사 담당자를 상대로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뉴스



이명박-반기문 '반갑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이 전 대통령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이승철 “안중범, 靑 개입 없었다는 허위 진술 부탁”

### 안중범, 보좌관 시켜 전경련 부회장에 메모 '특검 걱정 마라, 모금 문제 해결되면 문제없다'

안중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이승철(58)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에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등 거짓 증언을 해줄 것을 요구한 정황이 재판에서 대거 드러났다.

특히 안 전 수석은 이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특검 걱정하지 마라. 모금 문제만 해결되면 전혀 문제없다'는 취지의 전화를 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회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운) 심리도 열린 최순실(61)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안 전 수석으로부터 재단 설립 등은 전경련이 임의로 한 것이고,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부탁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안 전 수석은 전화 등을 통해 ‘국정농단’ 관련 최초 언론 보도 이후 ‘잘 마무리 되도록 힘 써달라’고 말했다고 기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는 입장을 견지

해달라’는 허위 진술 내지 언론 인터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재판에서 안 전 수석이 허위 증언을 부탁하는 취지의 전화를 한 내용을 적은 메모를 공개했다.

이 메모는 이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전경련 측 직원이 안 전 수석의 비서관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아 들은 내용을 적은 것이다.

메모에는 ‘수사팀 확대, 야당 특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새누리 특검도 사실상 우리가 먼저 컨트롤하기 위한 거라 문제없다. 모금 문제만 해결되면 전혀 문제없으니 고생하시겠지만 너무 걱정말라’고 적혀 있었다.

이 부회장은 “검찰에 가기 며칠 전부터는 안 전 수석의 전화를 아예 안 받겠다”며 “그랬더니 보좌관을 시켜서 저의 직원에게 이런 취지로 내용을 전달토록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안 전 수석이 ‘다 잘 될테니 입 닫고 있어라’, ‘언론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와도 걱정말라’, ‘우리가 뒷수습 해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많이 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경련 전무에게도 말해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안 전 수석은 국정감사 전에도 전화해서 ‘대기업들이 주도적으로 모금한 것’이라고 말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며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 종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하겠다고 하니, 안 전 수석은 ‘좋은 아이디어’라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초기 갖게 된 언론 인터뷰에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전경련의 아이디어였다고 밝힌 점에 대해 “청와대에서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경제인들 입장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의 말을 따라야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회장은 재판에서도 “경제수석이 인허가, 금융지원, 세부조사 등 경제계 모든 현안을 다 다룬다”며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필수였다”고 증언했다. /뉴스

## 민주당 “‘나쁜 X들’ 거론한 반기문, 대통령 되려는 분 언행 맞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언행이 연일 구설에 오르는 데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의 태도와 언행이라고는 믿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반 전 총장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묻는 기자들을 두고 ‘나쁜 X들이 예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은 국민을 대신한 것”이라며 “국민의 물음에 신경질 내고 막 말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신”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일본과의 굴욕적인 합의에 반 전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용단이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찬양했다”며 “국민들을 당혹하게 했던 분은 바로 반 전 총장 자신”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 책임을 기자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도 매우 잘못된 태도”라며 “국정농단의 전말이 밝혀지는데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박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 전 총장은 자신의 막말과 욕설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하고 촉구했다. /뉴스

## 정호성 “차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 가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면 보고 외에 대통령과 차명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평소 박 대통령이 업무용 및 차명 휴대전화를 본인이 소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며 “행사나 업무 중에는 꺼져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2개월 간 한 주당 평균 13회 정도 연락한 것 같다는 지적에는 “맞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차명 전화를 이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안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며 “우리 정치의 좀 아픈 부분인데 대통령과 통화하는 부분이 도청된다고 확실하다고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비 차원에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뉴스

## 정 의장 “선거연령 18세 인화가 글로벌 스탠다드”

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이른바 ‘선거연령 18세 인하’ 논란과 관련, “선거연령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18세”라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18세가 되면 선거권이 주어지는데 우리 한국 청소년은 18세가 됐는데도 1년 더 기다리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낙후된 나라”라며 “당연히 글로벌 스탠다드를 채택해야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어떤 분들은 아직 덜 성숙하기 때문에, 더 기다렸다가 (투표)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아는 한 한국 청소년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청소년과 비교해도 더 잘났고 더 똑똑하고 더 현명하지, 모자란 분들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확기사회에 나가고도 우리 청소년들이 1등이고, 과학기사회에 나가고도 1등이고, 가능올림픽대회에 나가고도 수년째 한국이 1등하고 있다. 아, 그런 청소년들이 무엇이 부족해 더 기다렸다가 투표하라는 것이냐”며 “당연히 참여해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게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뉴스

## 문재인 “이재용 영장기각,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이어서 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한 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것으로 특검 수사가 위축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면 더 엄정한 보강수사를 거쳐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기 바란다”고 특검에 당부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일자리 131만개” 공약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국가예산만 2200억원인데, 22조원은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이라며 “지금 해마다 우리 정부가 고용에 사용하는 예산이 17조원에 달한다. 그 중 10조원이면 200만원 월급을 받는 공무원 5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재정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재정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면 재원을 우선적으로 일자리 만드는 데 투입해야 한다. 국가재원을 늘리기 위해 우리가 조세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말씀도 오래 전부터 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